■ 여야 예산협상 돌입 … 이번주 중대 고비

계수소위 구성 대치… 또 날치기로 가나

새해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처별 심사가 끝나는 15일을 기점으로 여야간 대치 국면이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15일 밤 '비상 의원 워크숍'을 개최, 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예산 심의와 관련, 예산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 구성 여부가 새해 예산안 처리의 향배를 가름할 중대 변수가 되고 있다. 예산안 처리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인 계수조정소위와 관련, 한나라당은 부처별 심의가 끝나는 대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한 합의 없이는 소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 예결위원들은 14일 공동 성명에서 "정부·여당은 온갖 궤변으로 4대강 예산의 강행처리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여당의 명확한 입장 없이 예결위 일정을 계속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야당 위원들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 지원비 800억원의 전액 삭감,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비 3조 5천억원 가운데 2조 5천억원의 삭감, 사업연도의 5년 이상 연장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야당의 이 같은 요구를 무리한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야당의 예산 심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지난 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합의한 대로 부별 심사 직후 소위 심사를 시작하겠다"며 "내일(15일) 중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을 의결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결 원칙에 의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15일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미디어법의 절차상 문제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드러난 만큼 재논의 절차에 나서야 하고, 만약 수용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던 것.

하지만, 김 의장은 최거훈 비서실장을 통해 "민주당이 법적으로 자신이 있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헌재 심판 청구를 하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이날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어 민주당의 추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야 4당 예결위원단이 4대강 예산 등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野 "4대강 합의 안되면 불참" 與 "발목잡기"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첨예 대립

이낙연 4대강 예산 의결 민주당 방침과 달라 논란

민주당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14일 4대강 관련 예산을 의결, 당 지도부가 유감을 표시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농식품위는 이날 새해 예산안 17조1천618억원에서 5천236억원을 증액시킨 17조6천854억원을 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4대강 예산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 4천66억원도 포함됐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부 원안이 예결위에 가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원안이 통과될 것이지만 농식품위에서는 4대강 예산을 17.2%나 삭감한 것을 통과시켰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세종시 해법 독일서 찾자

민관합동위, 본·베를린 현지방문 추진

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대안) 마련에 앞서 외국 유사 사례인 독일의 본과 베를린을 현장 방문해 행정 비효율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5차 회의를 주재한 세종시 민관합동위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외국에 유사 사례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독일 방문을 할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부처 분리로 행정 비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감내할 정도의 수준인지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대안 마련에 앞서 대표적인 행정기관 분리 사례인 독일의 본과 베를린을 현지 방문하는 방안을 놓고 시기와 인원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아울러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가닥을 잡은 세종시의 모델이 된 드레스덴을 함께 방문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차 회의에서 원안과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자족기능 용지를 20.2%로 확대하는 내용의 발전방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추가 토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민관합동위원들은 행정연구원으로부터 '중앙행정기관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 보완 결과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충청지역민 이해 제고방안'을 각각 보고받고 의견을 교환했다.

세종시 실무기획단은 세종시 추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03~2006년 신행정수도 추진 내용과 위헌판결 후 후속 대책 등에 대한 논의 과정을 분석, 보고했다.

정부는 그러나 세종시 대안 발표 시점이 내년 1월 초로 연기된 만큼 당분간 속도 조절을 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정총리, 혁신도시 해법 내놓나

17일 해당 단체장과 간담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와 혁신도시 조성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4일 광주시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정 총리는 오는 17일 낮 총리공관에서 나주시 등 혁신도시 관할 자치단체장 14명으로 구성된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차질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다짐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이광영 부시장 등은 정 총리에게 ▲이전 기관의 연내 부지매입 완료 ▲연내 이전기관 승인 등을 요청할 방침이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 지 관심이다.

또 ▲대통령 주재 지방이전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종시와 동일하게 혁신도시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 이전 부지 매입을 미루고 있는 한전 등 이전 공공기관 대표 등이 참석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듣는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전국 혁신도시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 14명은 지난 10일 경북 김천에서 전국혁신도시 협의회를 갖고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한 前총리 더 안부른다" 檢, 체포영장 청구 시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4일 한 전 총리에게 더이상 소환 통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 더 이상 소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한다"며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당초 한 전 총리에게 11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한 전 총리가 거부하자 이날 오전 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한 전 총리는 재차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